

국가, 경찰, 경찰관 그리고 시민

경찰윤리: 국가와 경찰의 권한과 의무는 정당한가?

국민의 생존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

-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또는 못한) 이유는 뭘까. 사고 직후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대응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그날 밤 서울 이태원에서 156명의 꽃다운 이들이 숨졌다. 또 151명이 다쳤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여러 위험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구청, 시청 등의 행정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1일 공개된 112 녹취록에 말문이 막혔다. 사고 4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압사'를 경고하는 다급한 신고가 잇따랐다. 그 순간 국가는 없었다. 뒤늦게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 자유는 곧 자율이다. 자기 이유와 책임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개입 근거를 찾느라 바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올 9월 태풍 때 윤 대통령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홀했다.
-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다. 보수와 진보는 거칠게 보면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것이냐의 차이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작은 정부'를 돌아본다. 상황에 맞게 정부가 더 해야 할 일과 덜 해야 할 일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대전제가 '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일보, 2022/1106)

경찰의 역할과 국민의 저항(국민저항권)

- 정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와 이를 교사하고 방조한 이들까지 모두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도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고, 대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법상 소요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극우 유튜브 선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극우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집회를 마친 지지자들은 곧바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 무대에 올라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긴 바 있다. (한겨레, 2025/01)

경찰의 공권력과 저항

- 경찰은 시위대의 화풀이 대상이나, 시위대의 폭력성을 인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다. 어느 나라 경찰이 이렇게 무시당하며, 방패를 든 채 얻어 맞는가. 경찰은 작년부터 과거 집시법에서의 규제개념에서 벗어나 보호·보장의 의미를 중시해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일부 불법 시위대는 경찰의 無죄루탄 원칙을 악용하여 격렬한 몸싸움과 폭행을 행사한다. **생존권 차원의 노조 및 민원시위는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이익집단 간의 분쟁행위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한 공권력의 보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와 사용자, 민원 당사자 간의 분쟁내용이 핵심이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과 마찰이 핵심 주제가 아닌 것이다.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 그곳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적발되면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법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일단 경찰관에게 대들고 본다.
- 2000년 초 워싱턴에서는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된 불법 시위가 벌어졌다. 그 곳 경찰은 시내 중심부에 시위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와 폴리스 라인(Police Line)을 치고, 이를 침범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체포하여 24시간 보호조치 후 재판에 회부했다. 시위대가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문검색하여 불법 시위용품을 압수했다. 또한 시위대 본부가 있는 인근 대학 캠퍼스에 진입하여 압수수색과 사무실 폐쇄조치 등 강경하고 확고한 진압을 했다. 오히려 경찰 지휘자는 공을 인정받았고, 경찰관들은 3000~5000달러 정도 동원수당을 받았다. (경찰청 공보담당관, 2000/08)

공권력의 정당성



공권력의 정당성



Philadelphia officials announced a \$9.25 million settlement Monday with hundreds of people over several lawsuits challenging the police response to the protests and civil disorder in 2020 after George Floyd's death at the hands of Minneapolis police. (2023/03/21)



경찰의 공권력과 저항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경찰국 출범 때부터 장관이 고위직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경찰 길들이기'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권한을 더 확대할 경우 통제·장악 논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법에는 어디에도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조직에 관한 권한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며 "이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로 인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을 통한 경찰청 지휘·통솔, 특히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가능성으로 인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나아가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서 경찰청장의 수사관여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경찰행정과 치안행정 관할권이 없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경찰관 2417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경찰국 설치가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88%, '경찰국 설치하는 경찰중립화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9%와 5.1%였다. (법조신문, 2022/08)

경찰의 공권력의 필요성과 인권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 wearable PoliceCAM)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 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 이후 담당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0/11)

시민 생명보호 의무와 책임

- 이날 대한신경정신학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신고해도 지자체, 경찰, 소방이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을 철폐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법무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금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 발생 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신고 등이 이뤄졌던 상황에서 적절합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금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씨가 범행 전 6개월간 이상행동을 보여 112에 수차례 신고됐지만 경찰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해 실제로 안 씨가 입원했다면 적어도 방화·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동아, 2023/11/16)

경찰의 역할과 한계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단체 내부의 변호사들과 논의를 한 결과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위상이 실추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 사무총장은 "어떻게 이런 사람(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는지에 대해서도 선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내 감독 중에 빨리 훌륭한 분을 선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민위는 이달 13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등 협회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 이들은 고발장에 'A매치 경기 결과를 놓고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만한 자질이 되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도 피고발인은 방관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해태에 관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적었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대한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선수들의 다툼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문제에 중심에 섰던 손흥민·이강인을 비롯해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썼다. 두 고발 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 2024/2/27)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처벌



전신 문신자 출입자제 안내문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혐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경범죄 처벌법(불안감 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분은
해운대경찰서 형사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12** 또는 **형사당직 051) 665-0377**

 **해운대경찰서장**

아시아경제

경찰의 불신과 경찰의 역할

-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들이 “위화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민 항의를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제복 경찰들이 집회 현장 인근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해 주변 건물을 돌아다니는 일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복 경찰에 대한 존중이 예전보다 부족해진 걸 느낀다”며 “근무할 때는 정복 근무가 원칙인데 정복을 입었을 때 존중받지 못하니 사기가 뚝 떨어질 때가 많다”고 했다.
-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고급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출입 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지구대에서 일하는 B 경감은 “관할에 있는 비싼 아파트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경찰 출입을 막고 있다”며 “사실 경호 업체가 와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 경감은 “경호 업체 사람들도 제복 입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는 C 경위도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면 경호 업체 측에서 왜 출동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에 대해 캐물으며 검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돌아다니면 아파트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대책을 마련하고자 분주하다. 경찰에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지급하겠기로 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도 도입된다.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원 넘게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좋은 정책이다.
- 그러나 활용 가능한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다. 공경비(경찰)와 함께 국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당하는 민간경비가 해야 할 대책은 빠져있다. 경찰만으론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범죄의 예방과 대응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긴밀히 협조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에서 민간경비를 활용한 대책은 빠져있다.
- 민간경비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묶여있다. 이번 흥기난동 사건에서 보듯 국민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민간경비의 법적 권한 확대와 제대로 된 장비 보유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게 일정 부분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삼단봉과 가스총 등 호신용품 수준의 장비 대신 테이저건 등 실효성 있는 제압 무기를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 교통유도경비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 현재 부족한 치안 인원을 메꾸기 위해 '의무경찰' 부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간경비의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도입한다면 경찰력 낭비 없이 각종 공사 현장, 도로 등의 교통사고를 방지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더불어 일본처럼 교통유도경비에 다중 혼잡상황 업무를 추가할 경우 행사, 집회 등 다중 밀집 지역에 투입돼 '제2의 이태원참사'를 막을 수 있다.

경찰업무의 전문화와 경찰의 성별 차별



- “남경(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힘겹게 제압하고 있는 동안 여경은 구경만 하고 있더라. 남경 3명이 더 와서 수갑을 채우고 끝났다”고 언급했다.
-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남경이 주취자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 경찰은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청은 “증거자료를 남기도록 대응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며 “남경이 현장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여경은 촬영하라는 등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21)

경찰관의 사생활과 윤리

- 대만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 차 경찰관 케이트 샤오는 과거 뛰어난 미모로 관심을 받으며 유명인이 된 인물입니다.
-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한부모 가정의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힘들고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 대만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 차 경찰관 케이트 샤오는 과거 뛰어난 미모로 관심을 받으며 유명인이 된 인물입니다.
-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한부모 가정의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힘들고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찰관의 사생활과 윤리

- 국내에서 유부남 경찰관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 경찰관이 '품위 유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륜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영역이라는 주장에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기에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행정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찰공무원 A경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2015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장은 현재 B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 차 경찰관입니다. 동료 C경위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약 2개월간 11회가량 지속적으로 만나며 단둘이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서 2020년 11월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A경장은 징계에 불복, 2020년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이듬해 3월 기각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경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륜 관계가 아니었고, 사적 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사안으로 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는 "두 차례 호텔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감찰조사 당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둘이 공원에서 산책하며 돛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는 등의 행위를 했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며 "단순히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서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